

마약 대응 범부처 간사 식약처, 전담조직 폐지 기로

뛰는마약 걷는정부

작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 1만6153 집계
올 9월까지 적발 1만3708명...연령 어려져
텔레그램 등 SNS 통해 손쉽게 마약 구입
마약위험국가 전략...현실 맞춰 대책 강화해야

‘마약정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미 상당 기간 이전에 마약 위험국가로 변모한 실태가 최근 드러나면서 정부가 마약 관련 조직과 협조 체제 개편 등 현실에 맞춰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경찰 및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근 SNS로 손쉽게 마약을 구하거나 오토바이 킥으로 마약 배달을 받는 등 신종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마약 범죄 보도도 더 빈번해졌다.

최근 대검찰청 마약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매년 1만명대를 오가고 있다. 2020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 8050명, 작년에는 1만615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3708명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521명이었으나 2020년 4493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5077명으로 증가했다. 19세 이하의 경우 같은 기간 239명에서 313명, 450명으로 3년 새 44%가 증가했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는 국회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가상자산 또는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가 2019년 82건에서 2020년 748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



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트위터에는 마약이나 대마, 필로폰 등 단어가 1~2분 만에 하나씩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마약 유통 실태가 상당 기간 전 이미 위험국의 처지로 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정국이라는 오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마약 대책을 소홀히 한 배경에는 주무부처의 전담 조직조차 확정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책임진 정부는 마약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단속·수사를 제외하고 다수 부처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관세청은 마약 밀수정보를 수집하고,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처방정보를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및 유통단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해 마약류 관리 간사 부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뉴시스가 23일 마약류 안전관리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식약처를 취재한 결과, 업무를 담당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의 직제가 최근 존폐 기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약품안전국 산하의 기구로서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5월 임시 신설됐다. 이후 올해까지 1년씩 연장되며 운영을 해왔으나 올해 정식 기구로 인정받지 못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부처 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부처 간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 활성화, 당정협의회를 통한 마약류 종합 관리 대책 발표 등 마약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마약안전기획관의 유지 및 정기 직제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뉴시스

‘K-바이오’ 책임진 국장에게 마약까지... “이원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면서 주무 부처 내에 관련 조직이 정식으로 출범하고 기능도 확대돼 정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효과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마약류 안전관리 범부처 협의체인 마약류대책협의회는 간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의 존폐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현행 마약안전기획관은 임시마약류 지정 및 유통단속,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 각 부처 간 정보·현안 공유, 범정부 대책 수립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산하 기구로서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5월 임시 조직 형태로 신설됐다.

매년 평가를 통해 연장하는 수순을 밟아왔으나, 내달에는 행정안전부 평가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 부처 및 업계에서는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을 정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는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폐

지될 것이라 전망도 있었으나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자, 윤 대통령이 ‘전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발언하면서 역할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마약안전기획관 조직 신설 전 식약처는 범부처 마약류 안전관리 전담 조직 부처로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2018년 구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도 적었으며, 신종마약 증가에 따른 대응력도 미비했다.

그러나 마약안전기획관 조직 신설 이후에는 범부처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관리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됐다. 또 빅데이터 분석 역량뿐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가 적정도로 처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수사를 지원하는 등 영역이 확대됐다. 실제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약5억 5000만건의 빅데이터를 통한 마약 단속 적발률은 2019년 38.9% 였으나 올해는 68.2%까지 향상됐다.

실제로 의약품은 약사법, 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업무 성격상 다소 이질적이다. 국가적 미래먹거리로 규정된 제약바이오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마약류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소화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기 직제화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마약정책과·마약관리과 2개의 부서에서 마약중독 재활 지원을 담당하는 ‘마약유통제halt과’와 정보 분석 및 수립·조정,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는 ‘마약정보과’를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뉴시스

| | | | |
|---|----------------------------|---|--|
| 호남신문 i-honam.com | |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전로213스카이랜드309호 | |
|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 | | |
| 동부취재본부 | 전남 순천시 효효로 63 기동 2호 | (061) 905-2011 |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 (02) 2238-0003 | |
| 기사제보 (062) 222-2580 | 광고직통 (062) 228-2580 | 팩스 (062) 222-5547 | |
|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m | | | |
|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풍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